직능·이익단체도 선거만 하면 고소·고발 난무

결과 승복않는 선거문화 주민 멍든다

남구 장애인협, 신가 재개발추진위 등 곳곳 불협화음, 주민·회원간 마찰 빚어

각종 직능·이익단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둘러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선거문화, 선거과정에서의 각종 불·탈법 행위, 대표의 막대한 특혜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선거과정에서의 대립으로 인해 주민 또는 회원 간 마찰이 극에 달하는 등 그 부작용도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치뤄진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주택 재개발추진위원장 선거는 부정선거 논란과 후보자 간 감정싸움이 겹쳐 전형적인 선거 난맥상을 보였다.

재개발추진위회의 회장과 감사로 각각 입후보한 김모(70)씨와 또다른 김모(65)씨는 광주지방경찰청에 신가동 주택 재개발추진위원회 선관위원장 손모(75)씨를 상대로 가짜투표용지 등을 통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김씨 등에 따르면 신가동 주택 재개발추진위원장 선거와 관련 신가동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총회를 열어, 추진위원장 등 임원을 뽑는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특정 후보와 결탁해 가짜투표용지를 발행해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는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광주시남구장애인협회 회장선출을 앞두고 일부회원들이 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광주남구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가 지난 달 1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5대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으나 일부 회원들이 정관을 무시한 채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회원의 자격은 정관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이라는 정체불명의 규정을 임의로 만들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는 구실을 만들어 회장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정규 남구장애인협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은 "일부 회원들의 주장은 정관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해"라며 "이사회의 결의대로 정회원만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렀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가동 주민 하모(41)씨는 "이번 재개발사업과 선거와 관련 동네가 엉망이 되고 있다"며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언성을 높이는가 하면 일부는 길거리에서 만나도 알은 채도 않고 인상을 쓰는 험악한 분위기까지 연출되고 있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선거에 관여하고 있는 한 주민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경제·사회적으로 이권과 관계되어 있고, 선거를 진행하는 조직이 비도덕적인 경우가 많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나서 진행하도록 하는 시 차원의 조례를 만드는 등 법률·제도적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라남도교육청 검색했더니 '전라' 때문에 19禁?

포털 야후 검색 안돼 도교육청 요청에 해제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는 22일 오후 우연히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야후의 검색창에 '전라남도교육청'을 써넣었다가 깜짝 놀랐다.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창에 "검색키워드 '전라남도교육청'은 성인인증대상 키워드입니다. 성인인증을 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검색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검색어로,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성인인증을 받은 후 해당 사이트나, 단어를 찾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였다.

확인결과 이는 야후 측의 강도 높은 청소년 유해단어 검색 금지 조치 때문이었다. 청소년이 검색할 경우 유해사이트로 접속될 수 있어 '전라(全裸·알몸)'를 검색 금지어로 지정했고, 이 때문에 '전라' 단어가 들어가는 전라남도교육청 등이 검색 불가상태가 된 것이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가 곧바로 야후측에 요청해 이날 오후 전라남도교육청은 일단 검색 금지어에서 빠졌다.

그러나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전라남도' 지명이 포함된 주요 공공기관의 명칭이 여전히 성인인증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와 달리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는 '전라남도' 등을 검색 금지어에 포함시키지 않아 전라남도교육청 등에 곧바로 접속할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네티즌들이 야후에서 19세 접속 금지된 우리 교육청의 검색결과를 본 뒤 혹시 유해 사이트로 오해하지 않았을 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 광산서장에 김근씨

경찰청은 22일 광주 광산서장에 김근 광주청 경비교통과장을, 광주청 경비교통과장에 박근주 서울청 치안지도관을 임명하는 등 총경급 10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두 달 전 취임했던 권두섭 현 광산서장은 광주청 경무과로 대기발령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의사 병원서 숨진 채 발견

22일 오전 10시22분께 광주시 남구 한 요양병원 건물 뒷편에 이 병원 의사 김모(52)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있는 것을 병원 관계자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포대갈이 하고 국내산과 섞고…

수입쌀 국산 둔갑 유통업체 3곳·식당 15곳 적발

농관원 전남지원

중국산이나 미국산 수입쌀을 재포장해 값이 훨씬 비싼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섞어 판 대형 유통업체와 식당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1월 13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수입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대형 유통업체 3곳과 식당 15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J 농산은 지난 1월 10kg나 20kg들이로 포장된 중국산 쌀 82t(시가 1억1480만원 상당)을 구입한 후 다시 톤백에 담아 3배가량 비싼 2009년산 국내산쌀로 거짓표시해 영암의 R 상사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의 W 농산유통 역시 이달 초 20kg·10kg 들이로 포장된 중국산 쌀 241t(시가 2억25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영암의 H농산에 판매했다.

담양군에 위치한 I 양곡유통은 중국산쌀 23.7t을 톤백으로 구입해 2011년산 국내산 쌀(시가 4000만원 상당)과 7 : 3으로 혼합한 후 20kg들이로 포장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돼 압수조치됐다.

하지만 영암 R상사와 광주 W 농산유통의 쌀 가운데 압수분(200t)을 제외한 나머지 323t 물량은 이미 시중에 풀린 상태이다.

이들 유통업체들은 수입쌀을 공매낙찰업체로부터 구입하거나 중간 양곡상으로부터 구입한 후 야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인적이 드문 지방 정미소로 옮겨 국내산 쌀과 혼합하거나, 2009년산 국내산 쌀로 인쇄된 포대에 담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중국산 섞인 쌀 압수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직원들이 22일 담양의 한 미곡처리장에서 중국산 쌀을 섞어 국내산으로 포장한 쌀을 압수하고 있다.

광주 총인시설 입찰 탈락 금호산업 관계자 긴급체포

檢 "심사위원에 돈 건네"

광주시가 발주한 총인저감시설 시공업체인 대림산업 컨소시엄만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다른 컨소시엄에서도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사전 로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 수사가 시공사인 대림산업만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나머지 3개 컨소시엄의 '실패한 로비'에 대해서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22일 광주지검은 총인저감시설 시공사 선정 전인 지난 2011년 초 심사위원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당시 금호산업 본사 관계자를 긴급체포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총인저감시설 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림산업 임원, 광주시 공무원 2명, 대학교수 등 4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수사 대상이 광주시 설계심의 분과위원, 대림산업 관계자는 물론 시공사 선정 당시 대림산업 컨소시엄과 치열하게 경쟁했던 금호산업 관계자까지 포함되면서 향후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주 초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미 퇴사한 사람이어서 자세한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

윤필용씨 39년만에 재심서 무죄

쌍나팔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22일 부대운영비를 횡령하고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윤필용 전 사령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지난 1973년 윤필용 당시 사령관은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후계자는 형님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군법회의는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에게 모반죄가 아닌 횡령,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

○…1975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윤 전 사령관은 이후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전매공사 이사장,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을 역임했으며 2010년 지병으로 사망.

/연합뉴스

'임신한 아내 수장' 보험사기범 중형

광주지법, 징역 15년 선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임산부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재혼한 아내 명의로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뒤 임신한 상태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박씨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양모(3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고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시신 발견 지점을 특정한 점, 신고 사실을 은폐하려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6월6일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변에서 아내 김모(당시 26세)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한 뒤 강으로 빠트려 숨지게 한 뒤 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회의원 이윤석-도의원 양영복 몸싸움

서로 "폭행 당했다" 주장

총선 후보 경선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서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마을 회관 앞에서 민주통합당 이윤석 국회의원과 같은 당 소속 양영복(무안1) 도의원이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지역 농협 행사에 참석했다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서로 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의원과 양 의원은 각각 목포중앙병원과 무안병원에 입원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양 의원이 나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하고 다닌다기에 현장에 갔더니 양 의원의 동생이 나를 주먹으로 때리고 허리띠를 부여잡고 미는 바람에 차에 부딪혀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행사장을 떠나려는데 이 의원과 보좌관이 차량을 막아서고 이 의원의 보좌관이 내 멱살과 목을 잡아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반박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예약접수 중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개강:3월2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 9급 종합반 | 법원서기보 | 7·9급 검찰직 | 소방직
한빛고시학원
농업직 | 9급 야간반 | 기술직 | 사회복지직 | 명품 "강력단과"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